2024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I . 예비비 지출 현황 (4건)

- 지출결정액 : 1억 941만 9천원
- 지출액 : 1억 941만 9천원
- 이월액 : 0원
- 지출결정액 중 집행잔액 : 70원

- 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률 0.0%가 발생하였음.

〈 2024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 〉

(단위:천원)

세부사업	통 계 목	지출결정액 ㉑	지출원인 행위액 ㉒	지출액 ㉓	이월액 ㉔	집행잔액 ㉕=㉑-㉓-㉔
계		109,419	109,419	109,419	-	-
북 쓰레기풍선 피해지원	302-02 민간인재해 및복구활동 보상금	45,552	45,552	45,552	-	-
		34,324	34,324	34,324	-	-
		20,873	20,873	20,873	-	-
		8,670	8,670	8,670	-	-

II. 검토의견

○ 비상기획관은 2024회계연도 '북 쓰레기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 시민 지원'을 목적으로 4회에 걸쳐 예비비 1억 942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이를 집행*하였음.

* 불용률 0.0%, 집행잔액 70원

※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2014.10.20. 제정)에 따라 시장은 각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받고 있음.

〈2024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원)

예산과목				지출액(원)	지출일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소 계				109,418,930		
비상대비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북 쓰레기풍선 피해지원	민간인	45,551,650	'24.08.08.	제1차(12건)
			재해 및	34,323,720	'24.09.30.	제2차(23건)
			복구활동	20,873,240	'24.11.26.	제3차(17건)
			보상금	8,670,320	'24.12.13.	제4차(11건)

○ 비상기획관은 예측하지 못한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에 따른 시민의 피해에 대하여, 별도 지원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본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北 쓰레기 풍선 살포 피해지원 방침 수립(민방위담당관-'24.6.21./7.30./9.24.)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기관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계상 과목으로써,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본 예비비의 사용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도발로 발생한 시민의 피해에 대하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때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24)〉

별표기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실정 (통계목 포함)	비고
800	예비비및기타		
	801 예비비	01. 일반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비비 (각 회계별로 예산총액 대비 1% 범위 내에서 편성 필요) 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예비비 편성 한도는 없음) 03. 내부유보금 1.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 다만, 본 승인안의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에 이어, 2025년도에도 자체 예산편성 없이 같은 목적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원)

예산과목				지출액	지출일 (비고)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소계				4,983,000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북 쓰레기풍선 피해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4,983,000	'25.4.30.	제5차(2건)

※ 2024년 피해에 대한 추가 신청 접수 및 지원

- 예비비는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나 심의·의결 없이,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형식적 절차로 인하여 의회 의결권을 훼손*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사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에도,

* 「지방자치법」(제47조제2호)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을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

- 전년과 같은 목적의 사업이 연속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다음연도 세출예산 편성을 통한 지출이 아닌, 전년에 이어 예비비를 지속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또한, 관련 조례*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24년 4/4분기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본 승인안 제출일 현재까지도 보고하지 않고 있는바,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의회 보고 의무를 해태한 비상기획관의 해명이 요구됨.

*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 2024년 4/4분기 예비비 지출(2회 / 29,543,560원), 본 회기 보고 예정

○ 한편, 국회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통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첨부).

〈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2024.12.3. 공포, 2025.6.4. 시행)

※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 3(피해에 대한 지원) 신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자에 대하여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칙

- 제32조3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8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가. 피해 지원의 대상

-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않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무인자유기구 등)에 따른 피해

나. 피해 지원의 기준

- 생명(장례비), 신체(치료비) 또는 재산 피해(피해 복구비)를 지원

다. 피해 신고 및 지원 절차

- (자치구) 피해 신고접수, 피해 상황 조사 및 지원액 산정

- (서울시) 지원 여부 및 지원액 적정성 검토, 국비 지원 신청 ※ 市 자체 지원 가능

- (행안부)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운영, 국비 지원 결정 등 정책 수립·시행

라.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행정안전부장관 소속)

- 다만, 적의 침투도발 및 위해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전은 국가사무인 “국방”에 관련한 사항이라고 할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이하 생략)

- 재원 부담에 있어서 국가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수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재원 부담 방안 마련을 위한 비상기획관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됨.

※ 민방위 피해 지원 대책비(자치단체자본보조) 행정안전부의 국가 80 : 지방 20 부담안 제시 및 의견조회 진행 중(2025.5.9.), 국고보조율 상향 의견 제출(2025.5.12. 비상기획관)

전문위원	정 찬 일	입법조사관	최 석 훈
------	-------	-------	-------

〈민방위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3(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 6. 4.]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 제54조의3부터 제54조의12 신설) -

제54조의4(피해 지원의 기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피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제54조의3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
 2. 제54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 피해(제54조의6제2항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대상 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입은 피해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2.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 인공구조물 및 그 밖의 시설물에 발생한 피해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생명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치료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원을 받을 사람이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 급여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2, 제9조,

별표 1 및 별표 3,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별표를 참고하여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별표를 참고하여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시행일: 2025. 6. 4.]